



수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자	2016. 11. 2(수)
제목	[보도자료]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총 5매)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몸통이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
2016년 11월 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전국경실련은 오늘(2일,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최순실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의 김완배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교수), 송병록 전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 등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중앙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춘천경실련, 광명경실련, 안산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양평경실련 등 지역경실련의 주요 임원 및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해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현 시국에 대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3.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공백 방지를 위해 국회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몸통이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

□ 일시 :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식순

전체 사회 : 김삼수 정치사법팀 국장

- 11:00 ~ 11:10 : 개회(참석자 소개)
- 11:10 ~ 11:15 :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
 - 고계현 사무총장
- 11:15 ~ 11:30 : [1분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 고백하고, 수사에 응하라’
 - 양혁승 상집위원장(연세대 교수)
 -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 송병록 전 정책위원장이사장(경희대 교수)
 -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교수)
 -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중앙대 교수)
 - 정주영 양평경실련 집행위원장
 -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 김희수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등
- 11:30 ~ 11:35 :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다! 대통령을 수사하라!”
- 11:35 ~ 11:40 : 공동 선언문 낭독
 - 김완배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 11:40 폐회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대한 공동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몸통이기에 국민 앞에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의 붕괴, 민주주의의 훼손, 국가신뢰도 추락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기문란·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것만이 현재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의법처리 하는 것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하리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최순실 체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사 지체와 방조로 일관하면서 의혹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순실 등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화 하려는 저의를 갖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야당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

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토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중단상황이다. 비선실세에게 빌붙어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한 사람들, 인사 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 국정을 담당하기 어려운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국정운영의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오늘 박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다. 국민과 야당의 동의 없는 기존과 같은 일방적 국정운영 행태로는 시국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각을 이뤄 위기에 처한 국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도록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하여 추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의 미래설계는 와해됐고,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히 훼손됐다. 현재의 시국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성스러운 대통령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여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기문란·국정농단·비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 모두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과 같이 재차 촉구한다.

-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
- 하나. 국회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토록 하라.
- 하나.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을 해임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의전 부문만 남겨두고 축소하라!
- 하나. 국회는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리를 추천하여 거국내각 구성하라.
- 하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6. 11.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